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 耿 德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 耿 德

국문요약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태국은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9월 추안 정부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었던 쑤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의 WTO 사무총장직 당선은 태국이 국제무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태국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FTA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2001년 탁신 정부 출범 이후 FTA 추진은 태국 무역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태국정부는 향후 경제성장은 수출증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고려하고 있는 양자간 FTA 상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뉴질랜드),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인도, 일본, 뉴질랜드 및 미국 등으로, 아직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이 국가들은 연구 완료단계 혹은 협상 중에 있어 단기적으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FTA 대상국들은 선진국에서 후발개도국, 농업국에서 공업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양자간 FTA에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기타 ASEAN 회원국과는 대비되는 경제정책이다. 또한 태국은 다자간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성공적인 출범

에 기여하였으며, 남아시아와 동남아간의 협력체인 BIMST-EC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과정을 겪으면서 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태국은 ASEAN+3 체제의 발전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정부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전략 면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이고 있다. 탁신 총리의 각종 발언과 경제부처의 정책을 보면 이웃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국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물류와 동남아 제조업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의 무역정책 중심은 AFTA와 동아시아에 있으며, 그 보완적인 전략으로서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의 FTA정책을 통해본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EU와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와 같은 거대시장 완성이 목표이다. 동아시아는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하는 13개 국가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 자원빈국과 자원수출국, 거대시장과 기술국 등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어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에는 AFTA가 출범하였으나 기타 거대경제권에 비해서는 발전단계도 낮고 경제규모도 작다. 세계경제가 거대한 지역협력체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태국은 생존전략으로 FTA 추진과 거대경제권에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AFTA를 주도하고 있는 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을 파트너로서 동아시아 협력체를 주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AFTA 조기 추진을 이룩해냈던 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ASEAN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의 대외정책 그리고 ASEAN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한국의 동아시아 비전을 고려할 때 태국의 노력도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태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인 산업구조 고도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태국의 경제와 산업구조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진 상태이고 품질경쟁력도 일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AFTA를 통해 역내 무역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양자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산업구조 조정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출증대의 기회 외에도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어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고 자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태국은 WTO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경제무대에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FTA 등의 정책적 협력을 통해 WTO, APEC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략도 있다. 호주와의 농업협력은 좋은 예이다. 이미 태국은 AFTA 조기 실현을 이루어냄으로써 ASEAN의 중심국가로 등장하였다. 이후 탁신 정부의 정책 비전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중심이 될 것이며, 그 정책적 수단은 FTA를 통한 협력이라 할 수 있다. 태국이 ASEAN과 동아시아 협력체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이미 목격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뚜렷한 이상 태국의 FTA정책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속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9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2
1. 태국의 대외무역구조	12
2. 태국의 산업구조	17
3. 태국의 경제발전과 교역	19
가. 1960~7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19
나. 1980년대 제조업 성장	20
다. 19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22
제3장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과 FTA	23
1. 태국의 무역정책 변화 추이	23
가. 공업화단계에서 태국의 무역정책	23
나. 1990년대 태국의 무역정책	25
다. 경제위기 이후 태국의 무역정책	28
2. 태국의 FTA 추진전략	30
가. 최근 태국의 FTA정책	30

나. WTO체제와 태국의 FTA전략	31
다. 태국 FTA정책의 특징	33
3. 태국 FTA정책의 평가	34
가. AFTA 추진주체로서 태국	34
나. AFTA 추진을 통해서 본 태국의 FTA정책	35

제4장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40

1. 체크, 크로아티아	41
2. 칠레	42
3. 한국	43
4. 호주 · 뉴질랜드	43
5. 인도	45
6. 일본	45
7. 미국	47
8. 다자간 FTA	48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50

참고문헌 53

Executive Summary 55

표 차례

<표 2-1> 태국의 교역 추이	13
<표 2-2>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14
<표 2-3> 태국의 품목별 수출입(2002년)	16
<표 2-4> 태국의 교역조건 추이	16
<표 2-5> 태국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19

그림 차례

<그림 2-1> 태국의 산업별 GDP 구성 추이	18
----------------------------------	----

제1장 서론

1980년대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와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증대시켜온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태국은 IMF의 자금지원 이행요건에 의해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외자유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또한 태국정부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수출을 독려하였다. 한편 당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던 쑤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의 WTO 사무총장직 당선¹⁾은 태국이 국제무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정부는 쑤파차이 부총리 재임시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대상국가로 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을 선정하여 FTA를 제안한 바 있다.

태국의 무역정책에서 FTA가 중심이 된 것은 2001년 탁신 정부 출범 이후이다. 탁신 총리는 당초 보호주의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FTA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국정부는 향후 성장엔진은 수출증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1) 당시 WTO 사무총장 경선에서 쑤파차이는 후보경선을 벌인 공동당선자 뉴질랜드 총리 출신의 마이크 무어와 임기 6년 중 하반기 3년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다.

개척하게 되었고 FTA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2002년 3월, 태국정부는 향후 FTA 체결을 고려할 수 있는 국가와의 타당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다소 일방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나 대상 국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뉴질랜드), 체크, 칠레, 크로아티아, 인도, 일본, 뉴질랜드 및 미국 등을 선정하였다. 탁신 총리도 이 국가들과 양자간 경제협력과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해 2003년 동안 해당 국가를 모두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등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03년 상반기까지 양자간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태국이 고려하고 있는 FTA 대상국들은 선진국에서 후발개도국, 농업국에서 공업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양자간 FTA에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기타 ASEAN 회원국과는 대비되는 경제정책이다.

본고는 이처럼 자유무역과 FTA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해보았다. 특히 태국은 향후 우리나라의 FTA 대상국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ASEAN, 동아시아 FTA 추진시 협력이 절실한 국가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서론인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태국의 무역과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경제 현황을 서술하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으로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과 FTA정책의 전략과 특징을 서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태국의 주요국과 FTA 추진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5장은 본고의 결론이다.

태국정부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FTA를 추진 중에 있어 대부분의 자료가 비공개형태로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데이터는 저자가 태국정부내에서 FTA정책과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 상무부 무역협상국(Ministry of Commerce,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DTN)²⁾ 공무원과의 면담 내지는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태국정부에 대해 아이디어 제공과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는 국립 쉐라롱껀(Chulalongkorn)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의 수차례의 면담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반영하였다. 또한 각종 민간부문 자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의 자료를 활용하여 태국정부의 FTA정책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료수집과정에서 태국내의 전문가 의견을 많이 청취하였으나 이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중립적인 자료로 DTN의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2)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은 2001년까지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였으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소속으로서 무역정책 수립과 각종 FTA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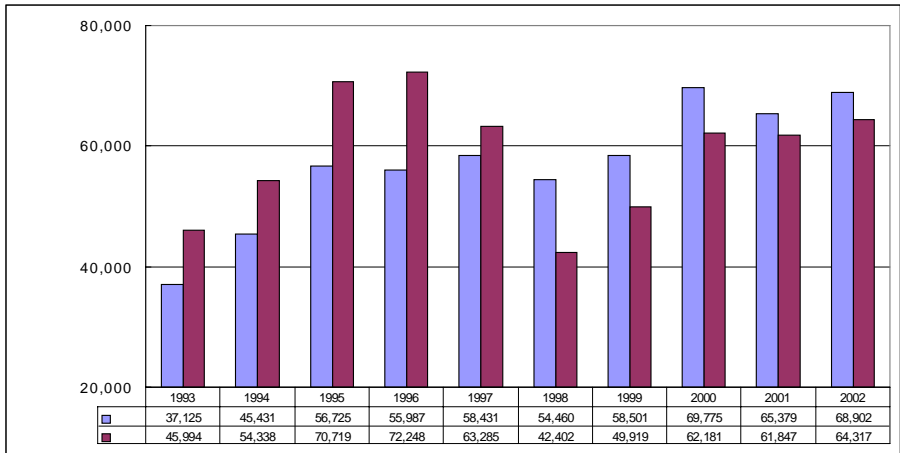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 태국의 대외무역구조

태국의 교역추이를 보면 1993년 이후 10년간 교역규모는 831억 1,900만 달러에서 2002년 1,332억 1,900만 달러로 약 60% 증가하였다. 1993년 371억 달러를 기록했던 수출은 2002년에 689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86% 증가하였고, 460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수입도 2002년에 643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40% 증가하였다.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하였던 1998년 이후 교역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이 감소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적자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태국은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투자증가와 이 기업들의 수출증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교역규모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는 경직된 외환제도와 부동산 등 비생산부문에의 과잉투자로 산업과 수출경쟁력이 점차 악화되었다. 1996년 태국의 수출증가율은 0%이었고 소비재 중심의 수입은 급증하여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8%에 달하여 외환위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1〉 태국의 교역 추이



자료: Bank of Thailand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표 2-2 참조)을 보면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국가들의 수출비중은 태국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약 35%를 차지하여 이 국가들에 대한 수출실적은 태국의 경제성장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동남아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은 1997년 이후 8%대로 그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AFTA 출범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수출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同 4대 수출대상국을 제외하고 태국은 2000년 이전까지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3%로 저조하였던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00년 4%로 증가하여 6위를 기록하였고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4.4%, 5.1%를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콩과의 교역을 합산할 경우 중국도 일본에 이은 3위의 수출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과 중-ASEAN

자유무역 추진 등 태국의 수출증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2010년 이전에 對중국 교역이 일본과의 교역규모와 대등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	미 국 11,364(19.4)	미 국 12,164(22.3)	미 국 12,656(21.6)	미 국 14,872(20.3)	미 국 13,278(20.3)	미 국 13,515(20.0)
2	일 본 8,852(15.1)	일 본 7,467(13.7)	일 본 8,264(14.1)	일 본 10,283(14.7)	일 본 10,008(15.3)	일 본 10,006(14.5)
3	싱가포르 4,698(11.2)	싱가포르 4,698(8.6)	싱가포르 5,042(8.7)	싱가포르 6,065(8.7)	싱가포르 5,312(8.1)	싱가포르 5,558(8.0)
4	홍 콩 2,780(5.9)	홍 콩 2,780(5.1)	홍 콩 2,978(5.1)	홍 콩 3,519(5.0)	홍 콩 3,319(5.1)	홍 콩 3,702(5.4)
5	말레이시아 2,529(4.3)	네덜란드 2,197(4.0)	네덜란드 2,197(3.8)	말레이시아 2,848(4.1)	중 국 2,873(4.4)	중 국 3,555(5.1)
6	영 국 2,067(3.5)	영 국 2,120(3.9)	말레이시아 2,123(3.6)	중 국 2,837(4.0)	말레이시아 2,731(4.2)	말레이시아 2,834(4.1)
7	네덜란드 1,860(3.2)	말레이시아 1,780(3.3)	영 국 2,092(3.6)	영 국 2,388(3.4)	영 국 2,337(3.4)	영 국 2,387(3.4)

주: () 안은 비중

자료: Bank of Thailand

태국은 미국에 대해 전자제품, 의류, 보석 등 공업제품으로부터 가공식품, 농산품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컴퓨터와 同 부품, 의류, 자동차부품, 직점회로 등인데 이는 대부분 태국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에 의한 생산품을 재수출

하는 것으로 본사와 투자기업간의 분업에 의한 교역형태가 대부분이다. 권역별로 태국의 제4대 수출대상지역인 EU에 대해서도 투자기업에 의한 재수출형태로 일본과 비슷한 수출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유럽계 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투자거점을 이전하고 있어 수출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태국이 ASEAN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컴퓨터와 同 부품, 전자제품, 집적회로, 쌀, 설탕 등이며 태국도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컴퓨터,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전자 및 기계류 관련 회사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한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전자제품과 관련된 자본재와 기계류는 분업화에 의한 역내 조달 및 무역자유화에 의한 수입대체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 태국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표 2-3 참조), 컴퓨터, 전자관련 제품이 최대의 수출품목으로 집적회로 및 관련제품이 89억 달러, 컴퓨터 73억 달러 그리고 전자제품이 56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초까지 강세를 보였던 수출품목인 섬유와 플라스틱제품은 각각 42억 달러와 2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품목들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수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전기기기 및 부품이 약 8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료 및 원유는 각각 74억 달러, 5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위 5대 품목의 수입액은 318억 달러로 전체 수입(643억 달러)의 약 50%를 차지한다.

〈표 2-3〉 태국의 품목별 수출입(2002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집적회로 및 관련품	8,900	전기기기류 및 동 부품	8,030
2	컴퓨터 및 부품	7,292	연료 및 윤활유	7,422
3	전자제품	5,671	산업용 기기	6,042
4	섬유	4,191	화학제품	5,170
5	플라스틱제품	2,837	원유	5,148

자료: Bank of Thailand

1996년 이후 태국의 교역조건 추이를 보면(표 2-4 참조), 수입물가지수가 높아 태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출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신 수입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무역이익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 태국의 환율은 1997년 3/4분기부터 199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수출상품의 경쟁력 부재와 낮은 브랜드인지도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정부가 무역정책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도 이처럼 수출에 불리한 대외조건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거대시장에로의 수출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한다는 전략으로 FTA가 대안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태국의 교역조건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단가지수	108.88	105.26	90.44	87.41	85.51	84.26	78.20
수입단가지수	111.09	106.86	97.60	93.14	100.05	108.86	102.60
교 역 조 건	98.01	98.51	92.67	93.84	85.46	77.40	76.22

자료: Bank of 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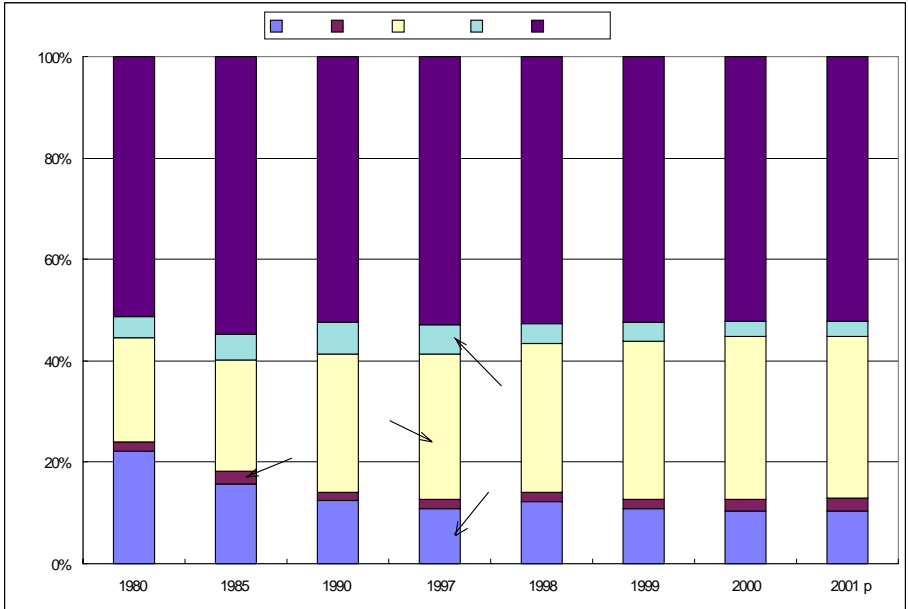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탁신 정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전략은 향후 태국의 경제성장과도 직결된 불가피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태국은 미국, 일본, ASEAN 등 전통적인 수출대상지역에 대한 수출증대와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

2. 태국의 산업구조

1961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태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1960년대에는 평균 8%, 1970년대에는 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 초에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후반부터 다시 10%대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세가 지속되면서 태국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태국은 경제기반이 농업인 국가로서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47%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66년 36.6%에서 1986년 16.3%로 감소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 내외로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태국경제의 근대화 및 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1985년의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현상을 계기로 일본기업들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6년 23.6%, 1995년 29.2%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34.9%에 이르게 되었다.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 또한 상업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산업이 위축되기 전에는 약 60%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태국의 산업별 GDP 구성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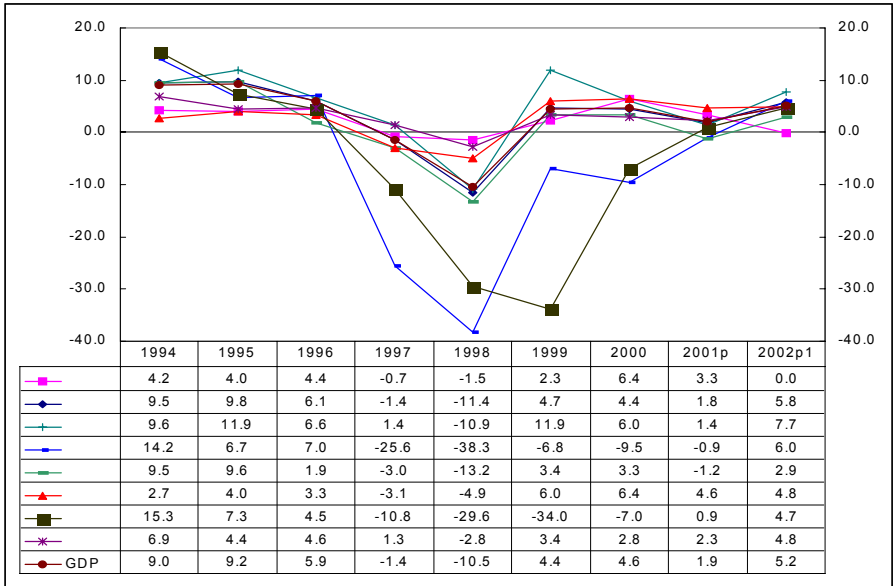
주: 2001년은 잠정치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태국의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표 2-5 참조) 1990년대 중반까지 태국의 산업성장은 제조업과 건설, 부동산, 유통부문의 성장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농업과 수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어 2002년에는 성장률이 0%를 기록하였다. 반면 제조업은 태국의 경기 침체기인 1998년과 세계경기 침체기인 2001년에 마이너스성장과 성장둔화 양상을 보였으나 회복시에는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태국의 국내 총생산도 제조업의 실적에 좌우되고 있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의 진원인 금융부문과 건설부문은 2000년을 고비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태국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2001년 잠정치, 2002년은 추정치.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3. 태국의 경제발전과 교역

가. 1960~7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1960년대 태국의 무역은 주로 쌀, 목재, 고무 등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였다. 당시의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은 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태국에는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기업 혹은 농산물 유통 및 수출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이윤은 태국 자

본의 축적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태국과 같은 농업기반산업 성장패턴을 ‘Agro-Industry’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태국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며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수입공산품을 국내 생산하는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 기업들의 생산품은 국내 소비시장 판매는 물론 섬유제품 등 일부 생산품은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 태국 기업들은 그들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면서 일부 공산품을 수입대체 생산하는 영업형태를 보여주었다.

1970년대까지 태국경제는 화교자본이 중심이었는데, 이때부터 일본 등 외국계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여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와 해외자본과 연결된 공산품의 수입대체산업화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자본을 축적한 태국기업들은 정부에 한국 등 신흥 국가들과 같은 공산품 수출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 산업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나. 1980년대 제조업 성장

1980년대 일본에서 엔화가치가 절상하고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던 것과 같이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 국가들은 동남아시아를 저비용의 매력적인 수출산업기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태국은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신흥공업국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였고 의류, 신발,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 경공업제품들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다국적기업들도 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기술산업에 해당하는 전자·전기제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었다.

태국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산업에서 비롯되었다. 태국의 대표적 노동

집약산업인 섬유와 의류는 1980년대에 11배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백만 명을 고용하는 최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섬유산업의 수출증대는 신발, 장난감, 보석, 플라스틱 제품, 가구, 가공식품, 고무제품 등 기타 노동집약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농업 관련 산업을 배경으로 성장한 태국계 기업과 이들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성공적인 결합은 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과 국내 조달 원자재에 의존하였던 대규모 수출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생산요소에만 한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외에서 재료를 조달하고 가공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 성장하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였다. 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해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는 태국 근해의 감소하는 수산자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어장을 개척하고 가공하여 수출하는 변화를 통해 1980년대 말에는 세계 최대의 수산가공국가로 성장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對태국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였다. 1985년 이후 엔화 가치 급등으로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해외생산이나 투자처를 찾아나선 동아시아 기업들은 태국을 적절한 우회생산기지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확대는 경제성장과 직결되어 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하였고 수출증가율은 20%를 상회하였다.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었던 중간기술수준 산업인 전기·전자부품과 자동차 관련 산업은 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과거 관세장벽을 넘어 국내시장 수요를 위해 설립되었던 외국과의 합작기업도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부분 전환하였고 일본기업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였다. 일본기업은 생산시설을 동남아 여러 국가에 분산배치하여 각 지역 공장을 특성화하면서 전체적인 제품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일본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우회생산방식은 태국에 다양한 부품생산기업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투자와 교역유형을 통해 태국경제는 일본기업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기업의 성격을 뚜렷히 보이게 되었다.

다. 19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동남아 신흥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오른 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와 대외개방형 경제발전 모델을 따르게 되었다.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에서 시작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말부터 컴퓨터 및 전자부품, 자동차부품과 전기제품 등 기술집약산업으로 옮겨졌다. 태국경제가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확대에 의해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1985년의 GDP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42%에서 1995년 70%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설명된다. 태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 산업화전략의 결과 무역수량지수가 1990년을 기준인 100으로 할 때 1985년 41.4에서 1995년 177로 10년 만에 교역량이 4배 이상 신장하였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나 태국의 지나친 무역 의존형 경제는 점차 외부의 충격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해외시장에 종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태국은 1990년대 이후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차 및 석유화학공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구조로 전환하여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태국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기술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부속품 및 자동차부품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태국정부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한 연계산업 육성과 고등교육의 활성화 등 적절한 구조적 고도화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첨단기술 도입은 부진하였다. 게다가 1990년대에는 강세를 유지하던 달러화에 바트화를 연동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은 약화되기 시작한 반면, 첨단기술제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제3장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과 FTA

1. 태국의 무역정책 변화 추이

가. 공업화단계에서 태국의 무역정책

태국은 관세제도 등을 운용한 수입대체정책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기타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완성재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높은 실효보호효과가 있는 관세구조를 택해왔다.

1960년대 초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은 산업육성을 위해 자본 장비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섬유와 농산물 가공과 같은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관련적 산업들과 조립형 생산을 장려하여 수입관세를 낮추었으며 조세감면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정부의 보호조치들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소비재와 중간재를 생산할 공장 설립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나타난 주요 수입대체산업으로는 자동차조립,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타이어와 종이제품 등을 들 수 있다.

공업화의 초기에는 대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수입대체정책이 유효하였으나 점차 공업 생산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1972년에는 제조업 수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증가는 수입대체산업들의 성장둔화를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1972~76년 제3차 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에 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수출산업에 특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투자촉진법이 개정되어, 소득세 면제, 자본장비에 대한 관세 및 조세 면제와 같은 일반적인 투자유인 이외에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관세와 영업세 면제, 소득세 감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국정부는 수출지향 공업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쳤으며, 1981년과 1984년에는 자국 수출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바트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ASEAN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역내시장의 확대와 NAFTA와 EU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에 대응하여, 태국정부는 보호주의의 개선,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아난(Anand) 前 총리는 AFTA를 제창하고 1993년 발족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태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무역상대국간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태국정부는 WTO체제에 활발히 참여해왔고 농업 및 방직산업 등 태국이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 대해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조치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점차적으로 우대관세가 철폐되는 GSP체제보다는 MFN체제를 선호하며 내부적으로는 관세제도 및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태국은 AFTA협정에 따른 관세인하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세인하 이외에도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수량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관세제품의 경우도 2000년 이후 AFTA 회원국들은 20% 이하의 낮은 관세율로 태국시장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일부 농산품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시장에 대해서도 태국은 지속적으로 자유화정책을 유지하였으며 2000년까지 일부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에 이어 원유, 전기, 가스분야에서 투명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선언하였다. 제조업은 20여년간의 두자릿수 성장 이후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심각한 침체현상을 보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태국정부는 소비재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였다. 특히 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는 종전의 40%에서 80%로 두배 인상되었다. 방직 및 의류산업의 경우 1994~96년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100%에서 45%로—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낮아졌으나 경제위기 이후 재정 확보 및 피해산업 보호를 위하여 60%로 인상되었다.

나. 1990년대 태국의 무역정책

경제위기 발생 이전 태국은 수출을 통한 고성장을 이룩한 신흥공업국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경험에 의해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이 FTA로 대표되는 대외시장적 성격이라면 경제위기 이전의 무역정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내산업에 대한 정책이 강하였다. 즉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정책을 통해 개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워 태국의 안정적인 수출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태국이 취한 무역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1990년 시작된 태국의 관세개혁은 1997년에 완성되었는데 同 개혁을 통해 우선 39개 관세율 범주를 6개로 크게 축소하였다. 관세율 6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 0%

- 원자재, 전자부품 및 국제 운송용 차량: 1%
- 기초상품, 자본재: 5%
- 중간재: 10%
- 완성품: 20%
-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상품: 30%

1997년에는 위의 6개 범주로 평균 관세율이 30.24%에서 17.01%로 낮아지게 되었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와 정부의 稅收 감소로 재무부가 담배,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30~60% 인상 조치하여 화장품, 가죽제품의 경우 관세가 10%에서 40%로 인상되었다. 또한 일시적인 조치로 수입관세 5% 외에 10%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관세양허안을 위반한 경우는 없었다. 태국은 같은 해 HS(Harmonized System) 6단위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수정하였다. 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태국의 관세 시스템은 국제기준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개혁요소는 당시에도 많이 남아 있었다.

1998년 12월 태국정부는 관세개혁위원회(Tariff Restructu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태국의 관세율체계를 연구하였고 대상품목을 재정비하였다. 새로운 관세구조는 부가가치 확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세율과 기존 구조의 합리화도 고려되었다. 당시에는 새로운 관세구조에 대한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장기적으로 태국의 관세체계는 3개의 범주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9년 8월 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자본재, 원자재, 기타 제품 등 630여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거나 면제한 바 있다.

2) 수입체계

태국은 무역왜곡을 최소화하고 무역자유화정책에 따라 안보와 보건 등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은 태국으로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다. 1995년 태국은 신형 오토바이, 디젤엔진,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

과 舊유고(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부터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였다.

3) 수출체계

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고 대부분의 상품은 자유롭게 수출되는 편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 즉, 경제적 안정, 공공보건, 공익성이 높은 품목 등 사전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AFTA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섬유와 의류 등 대상국과의 일부 민감품목에 한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4) 통관절차

태국정부는 자국이 동남아 교역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관 서비스를 개선해오고 있다. 관세서비스 개선은 WTO, APEC, ASEAN 계획에 맞추어 관세의 개혁과 자유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통관상의 개혁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는데, 우선 선적, 서류간소화 등을 도입하였다. 태국의 대부분 기업인과 투자기업은 자국 정부의 이러한 절차에 만족하고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태국정부는 능률적인 세관 통관을 위해 신고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소요시간도 30분 이내로 하는 ‘Long Room System’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태국의 관세국은 자국 정부가 인정한 수입업자, 수출업자 등에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통관절차보다 간소화 특혜를 부여하여 통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다.

다. 경제위기 이후 태국의 무역정책

1990년대 중반부터 태국의 수출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수입도 사치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였는데 1996년에는 GDP 대비 약 8% 수준에 이르렀다. 경직된 환율정책을 고수하고 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하자 1997년 초부터 외환시장에서 태국 바트화에 대한 투기 공격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방출을 통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트화의 폭락사태로 이어지고 8월 태국은 IMF에 대해 긴급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총리인 차왈릿이 사퇴하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차왈릿에 이어 집권한 추안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추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최우선과제인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는데, 부동산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한도를 대폭 완화하였고 투자활동에 대한 업종 제한도 크게 축소하였다. 즉 과거 태국은 자국 산업의 고도화와 일부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업종에 대한 제한이 많았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태국전통 산업, 국방, 보건 등에 관련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하였다.

추안 정부의 부총리 겸 상무장관인 쑤파차이는 WTO 사무총장 6년 임기중 하반기 3년 임기의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등 1990년대 후반기부터 태국정부는 국제교역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쑤파차이는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역설하였고 ASEAN 자유무역지대인 AFTA를 조기에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쑤파차이는 또한 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산업의 보완성이 높은 국가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에 FTA 연구 및 협상을 제안하여 이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AFTA

추진에서 2003년 조기 실행과 대상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는 등 AFTA 실현에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1년 출범한 탁신 정부의 무역정책은 총리가 직접 FTA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임 민주당 정권보다 더욱 적극적인 FTA정책을 펴고 있다. 민주당 정권과의 차별되는 점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전략인데, 민주당 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 선언적 의미이고 출발시점이라면 탁신 정권은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탁신 정부는 최종적인 FTA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중-ASEAN) 및 인도로 설정하였고 상무부에 실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FTA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경제권과의 FTA를 준비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FTA정책을 운용하는 데 학습효과로 활용하기 위해 호주, 칠레 및 한국 등과의 FTA 체결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에서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의존도가 높은 태국은 탁신 정부 이후에도 무역정책은 적극적인 FTA 추진과 무역자유화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태국상품의 경쟁력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태국정부의 노력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의 임무를 마친 추안 정부에 이어 안정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탁신 정부는 집권 후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적극적인 FTA 등 소위 인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태국이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수출확대라면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태국이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내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FTA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2. 태국의 FTA 추진 전략

가. 최근 태국의 FTA정책

태국은 자유화의지가 높고 세계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추안 정권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세계무역자유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AFTA 조기화를 주도하는 등 ASEAN 경제협력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미 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탁신 정부는 추안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의 한 축에서 중심이 되고자 한다.

태국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에도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의 경제개혁은 금융시스템 선진화, 부실채권 관리, 산업구조 고도화, 민영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개혁과제와 함께 태국은 FTA 추진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제개혁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IMF 등으로부터 모범적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정부의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외에는 내놓을 만한 성과가 미약하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체질을 강화하는 것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태국이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과 상대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미 경쟁력 있는 산업과 상품은 생존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종별 경쟁력 확보 또는 기타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태국경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경제는 탁신 정권 이후 성장과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임 정권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 취임 당시 탁신은 태국의 대표기업 경영인 출신이어서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받았다. 취임 초반 인위적인 경기부양, 농가지원 등 지지율을 의식한 듯한 정책을 펼쳐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성장률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경제의 안정성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과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국은 ASEAN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였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실천전략이 적극적인 FTA정책이다.

나. WTO체제와 태국의 FTA전략

태국은 자유무역주의의 신봉자로서 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의인 WTO, AFTA, APEC은 태국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태국정부는 WTO를 구속력이 있는 세계교역의 근간으로, APEC은 느슨한 형태의 지역협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AFTA는 태국이 주도하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다. WTO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태국은 AFTA 추진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ASEAN 경제통합을 확대하기 위해 소위 ‘AFTA plus’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WTO와 AFTA는 자국에 보완관계로 작용할 수 있어 태국이 무역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AFTA 조기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고 WTO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태국정부에서는 부처간, 즉 WTO와 FTA를 담당하는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WTO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FTA가 WTO 무역자유화에 저해요인이

라고 주장하면서 태국과 기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국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조차 다른 국가와 양자간 FTA 추진에 대해 무역정책이 총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우려하고, 태국은 세계의 교역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의 FTA 체결이 WTO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WT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전임 정권에서 FTA정책을 지휘하였던 쑤파차이는, 태국의 FTA정책은 높이 평가되나 FTA를 추진함에 있어 태국에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 고민하고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추진할 때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태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자유화 조건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 기타 국가와의 무역마찰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타국은 일본과 태국의 FTA 체결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선 양국의 산업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민감품목인 농산품은 후에 협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주고 있다. 이는 타국 총리가 WTO하에 부문별 조항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타국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정부 부처간, 이해집단간, 국가간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부문은 대체로 자국의 FTA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조직인 태국산업협회(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는 WTO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FTA를 체결하고 FTA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교역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WTO와 FTA정책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요인도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정부의 WTO와 FTA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 태국 FTA정책의 특징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국을 보면 체크,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지리적 근접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ASEAN 회원국이며 FTA에 적극적인 싱가포르가 FTA 대상국 선정에 있어 지역적인 접근을 중시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FTA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³⁾

또한 태국의 FTA정책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집권한 추안 정권은 수출증대에 주력하였다. 특히 내각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을 지낸 쉐파차이는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의 조기 실현,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을 위해 노력하여 태국정부의 FTA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001년 집권한 탁신 정권도 적극적인 FTA정책을 통해 이전 정권의 연속성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2001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탁신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팀 구성을 제안하여, 민주당 정권과의 FTA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갔다. 미국과의 FTA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태국무역대표부(TTR)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탁신 총리는 인도와의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에 실무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탁신 정권의 FTA정책은 하달(Top-down)방식으로 전개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FTA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2002년 말까지 단 한 건도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상국의 사정에 의해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연구종료단계에 있는 FTA가 있어 향후 1~2년내에 체결 가능성이 높은 FTA는 다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싱가포르는 2002년까지 일본, 뉴질랜드와, 2003년에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호주와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3. 태국 FTA정책의 평가

가. AFTA 추진주체로서 태국

1990년 필리핀의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인도네시아의 특혜관세협정(PTA)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구상, 싱가포르의 성장삼각지대(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등 ASEAN국가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A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특히 AFTA에 대한 관심은 1991년 태국의 아난 총리가 이를 다시 제안하고 싱가포르의 고촉동 총리가 지지하면서 고조되었다. 1991년 10월 ASEAN 경제장관회담(AEM)은 그동안 반대입장에 있던 인도네시아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AFTA를 15년에 걸쳐 창설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자카르타에서 AFTA의 실행 메커니즘인 CEPT를 확정하기 위한 제1차 임시기술작업반(Interim Technical Working Group: ITWG)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준비작업 끝에 마침내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정상들은 AFTA를 창설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AFTA 창설의 기본골격이 되는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과 「ASEAN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을 조인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AFTA 창설을 위한 CEPT 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에 조인하였다. 1992년 9월에는 AFTA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기구로서 각료급으로 이뤄진 AFTA 평의회(AFTA Council)가 열려 기본 문건들이 준비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CEPT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품목들의 목록을 서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각국은 관세인하 일정의 일반적 공식들을 제출

하였다.

1993년 1월 AFTA 창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각국이 준비관계로 모두 참가하지 못하자,⁴⁾ 同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AEM에서 CEPT 계획에 따른 관세인하를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개시시기를 재조정하고 예외품목의 비율을 당초 22%에서 10%로 축소하였다. 이후 1994년 9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6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 완결을 2003년까지로 5년 앞당기기로 합의하고, CEPT 대상에 비가공농산물을 포함하는 등 CEPT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AFTA 완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1995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5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것을 합의하여 ‘하나의 동남아시아’를 향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고, 실제로 베트남은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8년, 캄보디아는 1999년 4월 ASEAN에 가입하였다. 아울러 ASEAN은 WTO협정과 발맞추어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에 합의함과 동시에 통관절차 간소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AFTA의 가속화는 물론 AFTA를 보완하는 ‘AFTA plus’를 향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나. AFTA 추진을 통해서 본 태국의 FTA정책

앞서 언급하였듯이 AFTA 추진은 태국의 아난 前 총리가 주도하였으며, 이후 정권에서도 AFTA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1997년 쑤파차이 부총리는 ASEAN 경제통합의 조기 실현을 역설하였고 역외 자유무역협정인 CER(Australia and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와의 통합을 제안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극성을

4) 싱가포르와 태국만이 1993년 1월부터 CEPT 계획에 따라 관세인하를 시작하였다.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1994년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쭈파차이는 AFTA 완성시기를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고 관세율도 5%에서 0%로 인하대상품목에 농산물 포함 그리고 잠정적 예외상품을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추안 총리도 1994년 호주 방문시 키팅 총리가 ASEAN과의 협력을 위해 CER과의 통합을 제안하자 ASEAN 국가들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제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해 ASEAN 고위관료회담(SOM)에서 관세인하계획을 5년 앞당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⁵⁾ 때마침 우루과이라운드 다자통상회담이 타결되면서 ASEAN은 AFTA 실행계획의 조기 실현을 합의할 수 있었는데 이후 태국의 ASEAN, 특히 AFTA 추진과정에서 발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SEAN 경제협력에서 태국의 주도는 국내에서 이익집단과 해외에서 기타 ASEAN 회원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태국 의류제조업협회(Thai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AFTA 계획이 조기 실현될 경우 의류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야자기름과 석유화학제품도 태국내에서는 AFTA 조기 추진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제품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처럼 민감품목은 정치적 실행행사를 통해 예외품목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 및 압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는 AFTA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태국은 동남아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AFTA 조기 추진이 필요하고 오히려 현재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서비스와 농산물까지 AFTA 대상품목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태국은 ASEAN 사무국과는 별도로 AFTA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는 등 독주하였으나, 同 건은 ASEAN 사무국내에 AFTA unit를 설치하여 연 2회

5) 당시 ASEAN 고위관료회담에서는 태국의 제안이 인도네시아에 의해 거부당하였으나 비공식 ASEAN 경제장관회담에서는 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합의하였다.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태국이 주도하는 AFTA는 1994년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 회담에서 AFTA를 2008년에서 2005년으로 조기 실현키로 전격 합의하여 태국정부의 노력이 크게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관세인하대상품목에 대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인하품목 :

- 1998년 1월까지 20% 이상 관세를 20%로 인하하고 2003년까지 20%에서 0~5%로 인하한다.
- 2000년 1월까지 20% 이하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2) 신속인하품목

- 2000년 1월까지 20% 이상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 1998년 1월까지 20% 이하의 관세는 0~5%로 인하한다.

또한 AEM에서는 잠정적 예외품목은 1995년부터 5년간 20%씩 관세인하 적용품목으로 전환키로 합의하였고 모든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CEPT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처럼 태국은 AFTA 발전과정에서 농산품을 포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의 논의 내용과 1994년 제26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안 前 총리의 개회사⁶⁾를 보면 태국의 무역정책, 즉 FTA가 단순한 관세를 철폐하

6) “전 세계 무역환경은 개발도상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일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비경제적인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이 발전하면서 수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SEAN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까? 가장 솔직한 해답은 ASEAN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통합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전통적인 수출시장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무역원활화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AFTA는

는 무역자유화가 아닌 ‘FTA plus’라는 철학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SEAN국가에서는 태국이 주도하는 AFTA 조기 추진과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관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등은 확실한 수출 상품이 부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방이 완성되어 있는 국가이고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FTA 체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타 국가는 FTA 체결시 자국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자동차에 관해 갈등을 보이고 있어 조기자유화 논리는 받아들여지 못하며 추진은 신중하게 한다는 입장으로 인해 FTA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APEC이라는 거대 경제협력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태국 무역정책의 우선순위는 AFTA에 있다. 1998년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가 시작되기 이전 APEC 실행계획하에서 자유화에 대해 태국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APEC이 설정한 자유화 수준보다 심도 깊은 AFT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PEC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태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ASEAN과 태국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 AFTA의 완전자유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태국이 농산물을 AFTA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태국정부는 이 국가들을 설득하여 태국의 제안이 채택하도록 하는 외교력도 발휘하였다. 1995년 4월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6차 AFTA 평의회에서는 CEPT 계획에 비가공 농산품을 포함하기로 하였고, 제7차 AFTA 평의회에서는 이의 사항을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1996년 1월부터 CEPT 계획에 모든 비가공 농산품의 68%가 포함되었으며 20%는 이후 7년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5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AFTA를 15년에서 10년까지 앞당기는 데 합의하였고 비가공 농산물의 CEPT 포함은 2010년까지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심하게 진행되었는데 1996년 4월 SEOM에서 인도네시아는 비가공 농산품의 자유화를 10년으로 주장하였고 쌀과 설탕을 ‘민감품목’에서 ‘극히 민감품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여 태국과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AFTA 실현을 통해 APEC과 보조를 맞출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의 고위경제관료회담(SEOM)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여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⁷⁾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고 같은 해 AFTA 평의회에서 당초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여 2010년까지로 합의하여 쌀과 설탕을 CEPT에 포함하였다.

태국정부는 AFTA 프로그램의 지연으로 자칫 ASEAN 협력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ASEAN이 2020년 AFTA 완성에 동의한다면 APEC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APEC과 동일한 계획의 AFTA는 의미가 없으며 ‘AFTA plus’를 지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APEC-EVSL은 자칫 AFTA의 장점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1997년과 1998년 동안 국내 이익집단의 조율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태국은 A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국의 APEC-EVSL은 AFT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하였다.

7) 당시 인도네시아측은 ASEAN이 100년 이내에 FTA를 완성시킨다면 가능하나, 20년 이내에 추진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제4장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다자간 협상과 달리 양자간 FTA는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 제거가 용의하고 다자간 FTA보다 더욱 내용이 깊은 시장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상품교역이라는 전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외 분야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SEAN내에서 태국이 그동안 무역원활화와 투자자유화, ASEAN국가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태국의 FTA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국제경제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거대시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01년 10월 ASEAN과 10년내에 FTA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긴밀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동남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ASEAN을 방문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정상들을 만나 일본과 ASEAN의 경제긴밀화관계(Close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키로 하여 동남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1990년대 말부터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에서도 일본정부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를 제안하였을 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역내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여 무산되었던 전례와는 크게 변화된 입장이다.

경제통합에서 태국은 고유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다. 태국 상무부 DTN 관계자들은 1999년 이전부터 이미 양자간 FTA를 추진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태국이 공식적인 FTA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1999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한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칠레 등이 협상대상국으로 선

정되었다. 1999년은 ASEAN 역내 국가인 싱가포르가 일본, 호주와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그룹을 구성한 시기여서 이때부터 태국의 양자간 FTA 계획이 빠르게 수립되었다. 태국의 양자간 FTA 접근은 크게 (1) 쑤파차이 시기(1997년 12월~2001년 1월)와 (2) 탁신 시기(2001년 2월~현재)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쑤파차이 시기에 태국은 호주, 칠레, 체코, 크로아티아 및 한국 등 중소규모 국가와 FTA를 제안한 바 있고 이후 탁신 시기에는 일본, 인도,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권과의 FTA 현황을 소개한다.

1. 체코, 크로아티아

체코와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1998년과 1999년 쑤파차이 부총리의 유럽방문기간 중에 FTA를 제안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쑤파차이 부총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였기에 지리적으로 먼 크로아티아와의 FTA를 제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유럽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이다. 태국은 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2004년 EU 가입이 예정되어 있고 舊유고연방이었던 크로아티아는 서유럽과 동유럽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소규모 국가와의 FTA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FTA 정책 조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경제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국의 궁극적 목표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자국의 수출증대이므로 향후 거대경제권

과의 FTA협상에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규모 국가들과 경험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체크는 EU로부터 태국과의 FTA 추진 중단을 요청받고 태국에 대해 FTA 제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도 태국의 FTA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탁신 정부 이후 이 국가들과의 FTA 논의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2. 칠레

칠레와의 FTA도 쑈파차이가 제안하였다. 칠레는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FTA에 이어 2002년 한국과의 FTA협상에 성공하는 등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는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어느 지역에도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 형평을 유지하면서 상호주의에 기초한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해오고 있어 경제규모, FTA정책 면에서 태국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칠레는 지역무역협정인 MERCOSUR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대경제권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EU 등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국가로는 멕시코,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과 FTA가 발효되었고 볼리비아, 파나마, 쿠바 등과는 협상이 진행하고 있다.

칠레의 FTA정책과 경제구조를 통해 볼 때, 양국 정부는 서로 타결 가능성이 높은 FTA 파트너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2002년 말까지 타당성 연구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칠레정부가 2002년까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였고, 실제 태국과의 FTA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한국과 태국의 FTA 추진은 2000년 공동연구를 완료한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태국의 쾰라롱껀대학교의 공동연구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FTA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2001년 부문별 효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 추진, 거대경제권과의 FTA 연구 및 농업부문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한 탁신 총리가 FTA협상에서 농산물 제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질 경우 연구재개 혹은 초기단계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며, 또한 중국과 일본의 ASEAN과의 FTA 추진 등 주변 분위기가 ASEAN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FTA 추진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호주 · 뉴질랜드

2002년 5월 호주를 방문한 탁신 총리는 하워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향후 3년내에 양자간 FTA 체결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태국-호주 FTA plus」에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간 교역자유화 외에도 태국의 젊은층 근로자의 호주취업을 합법화하고 원활화하는 취업비자협정과 테러방지를 위한 양국간 정보공유협정, 마약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FTA와 인적교류 확대라는 두 가지 결실을 맺게 되었다. 태국은 호주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 섬유·의류, 열대 농산물 수출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는 對동남아 수출 전초기지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0년 약 50억 달러이며, FTA 체결 이후 교역규모는 크게 증

가할 전망이다.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시 향후 20년간 태국은 252억 달러, 호주는 66억 달러 규모의 GDP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⁸⁾

양국간 FTA 체결은 위생, 검역 등 양국간 현안이 해결되면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호주와의 FTA가 체결되면 태국은 수출시장 확대라는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양국은 케언즈그룹으로서 이미 WTO에서 정책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APEC에서도 양국은 중소기업권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어느 경제권에도 치우치지 않는 APEC 방향 설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ASEAN과 동북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희망하는 호주가 이 지역 진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경제권과의 협력체인 AFTA-CER 추진시 영향을 미칠 경험적 FTA로서 주목받게 된다.

싱가포르, 홍콩 및 칠레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도 태국과의 FTA를 고려하고 있는데, 태국은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금융 등 서비스부문의 협력을, 뉴질랜드는 경쟁력 있는 자국산 축산물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태국과 호주·뉴질랜드간 FTA는 태국의 DTN이 2001년 8월 국제경제정책위원회(CIEP)에서 양 지역 통상장관이 전략적으로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공동연구팀은 2002년 3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단기적으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양자간 FTA이다.

8) www.dfat.gov.au

5. 인도

2001년 인도를 방문한 태국 외무부장관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양국간 FTA가 체결된다면 태국의 기업들에 인도가 유익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라는 견해⁹⁾를 피력하면서 이른 시일내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9월 인도를 방문한 탁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을 제안하였고, 11월 비즈니스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간 FTA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바지파이 총리에게 조속한 FTA 연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FTA정책 외에 탁신 총리가 인도와의 FTA에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통신회사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우선 경영자로서 탁신은 인도의 IT와 소프트웨어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태국 최고의 통신회사 주주로서 이러한 환경을 활용한다면 태국의 차세대산업인 IT부문 성장의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일본

태국의 일본과의 FTA는 기타 FTA가 수출시장 확보라는 전략과 달리 일본기업의 태국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일본계 기업들은 수출과 경제성장, 기술이전, 외자유입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태국의 경제위기, 일본의 경기침

9) The Nation, 2001년 7월 19일.

체, 중국경제 부상 등은 이러한 양국간 경제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과 인근 미얀마,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한 생산비용과 일본계 기업의 경영악화는 태국에서의 투자 축소 혹은 취소현상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상승한 생산비용과 낮은 기술수준은 태국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은 일본계 기업의 對태국 투자가 절실하고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발전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3년 6월 Asian Leaders in Tokyo에 참석한 태국의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간 FTA의 최초단계에서 농산물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이 장애요인임을 의식하고 있는 탁신 총리는 중요 국가와의 FTA는 문제점이 적은 부문부터 해결하여 차후 협상을 통해 완전한 형태의 FTA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일본과의 FTA협상시 농산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FTA협상에서 일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쌀, 설탕, 타피오카 및 닭고기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양국간 FTA 추진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농산물 유통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탁신 총리는 일본과의 FTA를 통해 태국은 투자 유치, 서비스 수출 등의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FTA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설득하고 있다.

탁신 총리와 태국정부가 일본과의 FTA에 관하여 밝힌 입장을 분석해보면, 태국의 양자간 FTA, 특히 일본, 미국, 인도 등과의 FTA는 잠재적인 거대시장을 창출하고 태국으로의 FDI 유입을 증가시켜 안정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태국은 일본과의 FTA 체결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선 양국의 산업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처럼 농산물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미국

2001년 12월 태국 상무장관은 USTR을 방문하여 미국과 태국의 FTA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¹⁰⁾ 同 제안 이후 USTR 대표가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 DTN과 공동연구팀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연구그룹 구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태국 FTA정책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태국이 고도성장을 달성한 데에는 對美 수출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 유럽과 일본상품이 각축을 벌이는 미국시장에서 태국은 이 국가들에서 사향화된 의류, 신발 등의 수출을 확대하였고 중저가의 전자제품을 틈새시장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對美 수출패턴도 중국에 의해 시장을 빼앗기게 되었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 전자제품과 기계류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태국은 미국시장에서 수출감소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향후 태국정부가 추진하게 될 미국과의 FTA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전 세계 상품의 수입시장인 미국은 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에 기타 국가와 무역마찰소지가 있고 태국과의 FTA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APEC내의 경제협력과 자유화를 강조하며 태국정부의 FTA 추진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0) 『日本經濟新聞』, 2001. 12. 8.

8. 다자간 FT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은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FTA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AFTA 외에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자협정으로 동아시아(ASEAN+3) 자유무역협정, CER, BIM-STE(C(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으며, 현존하는 최대 경제블록인 EV, NAFTA 출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을 구상하고 있다. ASEAN+3의 발전된 형태인 동아시아 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EAFTA) 구상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ASEAN+3 협력의 실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태국은 1997년 자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아시아국가(ASEAN+3)간 견고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태국이 AFTA 이외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이기도 하다. 한국·중국·일본은 1990년대 중반 ASEAN 정상회담 개최시 대화상대국 자격으로 초청받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형식적인 회담 혹은 협력 수준에 그쳤으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역, 금융 등 경제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998년 필리핀 ASEAN 정상회담부터 ASEAN+3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고 이후 경제장관회담, 무역장관회담, 중앙은행총재회담 등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실무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동아시아지역 13개국을 거대경제권인 일본을 비롯, 단일국으로 최대시장인 중국,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 다양한 지역으로 EU, NAFTA와 달리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일본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패권주의에 대한 상호견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ASEAN의 입장차이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태국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도 협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한국과 함께 중재국으로서 의견조율 등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통화위기 재발방지와 위기시 상호 협력을 위한 ‘Chiang Mai Initiative’는 태국의 역할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현재 ASEAN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과 관련하여 태국은 ASEAN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ASEAN FTA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태국은 미래에 세계경제를 미국, 중국, EU가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협력체 형태로 NAFTA, EU 그리고 동아시아협력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SEAN-CER은 현 단계에서 ASEAN 회원국간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이나 2001년 9월 양 지역 통상장관은 무역협정보다 하급단계인 ‘ASEAN-CER Closer Partnership’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東티모르 독립과정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호주 간 갈등, 교역품목이 농산품과 1차산품으로 보완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인 경제협력체로서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IMST-EC는 거대시장 인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남아-남아시아간의 인도양 연안 협력체이다. 그러나 BIMST-EC는 남아시아지역 협력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 Associ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추진이 다소 더디고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가 개도국 수준이어서 교역증대, 산업의 보완성을 통한 경제발전 등의 효과는 미지수이나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태국이 BIMST-EC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태국의 FTA정책에 관해 서술하였는바, 태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WTO하에서 FTA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의 제한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 구체적이고 공개된 문헌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태국의 FTA정책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탁신 정부와 추안 정권을 비교해볼 때, 탁신 정부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전략 면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이고 있다. 탁신총리의 각종 발언과 경제부처의 정책을 보면 이웃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국내 산업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인 전략으로 물류와 동남아 제조업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FTA 추진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의 대외정책 중심은 AFTA와 동아시아에 있으며, 보완적인 전략으로서 양자간 FTA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과연 태국이 양자간 FTA정책을 취하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자면, 정책적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EU와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와 같은 거대시장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는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하는 13개 국가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 자원빈국과 자원수출국, 거대시장과 기술국 등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 협력가능분야가 많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에는 AFTA가 출범하였으나 기타 거대경제권에 비해서는 발전단계도 낮고 경제규모도 작다. 세계경제가 거대한 지역협력체로 재편되는 현상

에 대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태국은 생존전략으로 FTA 추진과 거대경제권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AFTA를 주도하고 있는 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을 파트너로 동아시아협력체를 주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AFTA 조기 추진을 이룩해낸 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ASEAN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 그리고 ASEAN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한국의 동아시아 비전을 고려할 때 태국의 전략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태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인 산업구조 고도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태국의 경제와 산업구조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상실하였고 품질경쟁력도 기술이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AFTA를 통해 역내 무역활성화를 기대한다면 양자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산업구조 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수출증대의 기회 외에도 양질의 제품이 수입되어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고 자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1998년 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내용의 핵심은 금융시스템 정비와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증대였다. 그동안 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자제품을 수출하면서 고도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곧 태국의 수출증대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으며, 태국의 FTA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태국의 FTA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무역정책 임에는 틀림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 FTA정책의 핵심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실현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완성이다. 탁신 정부 출범 당

시 인기와 지지도를 의식한 경제정책이 발표되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FTA를 추진하는 데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태국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실적과 정치적 배경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국의 신중한 선정과 경제적 득실을 정확히 계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요건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 율. 2002. 「AFTA 관세인하계획 추진과 향후과제」. 『KIEP 세계경제』, 4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용걸. 2000. 『AFTA-CER간 연계가능성과 시사점』. 지역연구시리즈 00-3.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 권경덕. 2000. 「한-태국 FTA 타당성 검토」. 외교통상부 수탁용역(대외경
제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정인교 · 이경희. 2000.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시사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양문헌>

일본어 자료

- 木村福成 · 鈴木厚. 2002. 12. 「加速する 東アジア」. 『ジエトロ』.

태국어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2003. ASEAN-China Free Trade Area. (in Thai)
- _____. 2002. Thailand and Free Trade. (in Thai)
- _____. 2002. Thailand and AFTA.
- _____. 2002.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ailand and China. (in Thai)

<서양문헌>

-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y. 1999. *Trade Policy Review*.

Fumio Nagai. 2003. *Thailand' Trade polic: WTO plus FTA?* (March)

_____. 2001. *Thailand's Attitue towar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ASEAN Free Trade Area.* (March)

<인터넷>

www.dfat.gov.au

www.bot.or.th

www.boj.go.th

<신 문>

Business Day

The Nation

Bangkok Post

Thai Rath(Thai language)

Executive Summary

Thailand's FTA Policy and its Implications

Kyoung Doug Kwon

Thailand expanded its exports to help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98. To avoid a recurrence of the crisis and to achieve sustained economic growth, FTA policy became the most important external policy for Thailand from 1998. The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strongly supports a free trade regime, advocating the early conclusion of an AFTA (ASEAN Free Trade Area) and FTAs with large economies such as the U.S., Japan and EU.

In comparison to other major ASEAN countries, Thailand has shown a positive attitude towards establishing bilateral FTAs. Although Thailand has not succeeded in concluding any FTAs yet, its list of potential partners includes Australia, Chile, New Zealand, Japan and India.

The features of Thailand's FTA polic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the geographical diversity of its potential partners. Thailand's attention has not been limited to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lso interested in establishing an FTA with the Czech republic in Central Europe and Chile in South America.

Second is the continuity of the FTA policy. Despite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in early 2001—from the Democratic Party led by Chuan

Leekpai to the Thai Rak Thai Party led by Thaksin Shinawatra—Thailand has maintained a positive FTA policy. For instance, the initiative to set up FTA study groups with Japan came from the Thai Prime Minister himself when he visited Japan to meet Prime Minister Koizumi in November 2001. Talks on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ere initiated by the Thailand Trade Representative, a newly created body with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Most FTA policy is formed by top-down initiative from the Prime Minister.

Among ASEAN members, Thailand and Singapore have been the most enthusiastic in setting up, accelerating and deepening free trade through promot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AFTA and AFTA plus. As a bilateral approach to free trade, an AFTA would make it possible to abolish internal tariffs between the two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us would facilitate further market integration. In addition, FTAs are not limited to traditional trade areas such as trade in goods. It is therefore no surprise that Thailand has been active in promot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as well as trade facilitation and has even been active in promoting freer movement of labor among ASEAN countries.

The Thaksin government, compared to the Chuan government, seems to have a clearer vision in terms of uniting Thailand's trade policy with its industrial policy. By looking at his speeches, Thaksin is trying use FTA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 strategy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become a strategic hub for regional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networks. In addition, by promoting bilateral FTAs, the Thai government hopes to realize an East Asia FTA comparable to the EU and the FT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3. 10)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추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 ~ 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彥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議論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 · 李晟鳳
97-07	韓 · 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王允鍾 · 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李昌在 外
97-09	東아시아 貿易 · 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97-11	韓 · 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浩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趙顯浚

98-0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1997.12~1998.6) : 綜合深層報告Ⅰ	張亨壽・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的 현황과 과제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王允鍾・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柳在元・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李昌在 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李晟鳳・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張亨壽・李昌在・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的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徐錫興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Byung-il Choi・Eun Mee Kim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元容杰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敎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金寬浩・李性美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議論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鄭余泉・崔秉熙・韓貞澈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洪翼杓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全載旭・崔義炫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曹琮和 編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曹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Ⅰ 동북아 경제협력: 총판권	李昌在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Ⅱ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敎 外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Ⅱ	黃祥仁・王允鍾・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③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④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煥·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產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 · 徐暢培
02-01	DDA 총집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를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02-13	한 · 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 · 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玠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02-17	1990년대 이후 한 · 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 · 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 · 鄭衡坤 · 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 · 中 · 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槿 · 楊斗鏞 · 吳奎澤 · 金恩京
02-25	한 · 중 · 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 · 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對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關한 研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對한 基準」에 關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敎·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關한 연구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關한 연구	朴泰鎬·文字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關稅協力 활성화방안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關한 분쟁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對한 수입규제」에 關한 분쟁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關連 과세제도에 對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對한 시사점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 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정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尹美京 · 李奎億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朴映坤 · 尹錫明

저자약력

權耿德

한국의국어대학교 태국어학과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kd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태국』 (1998)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2002) 외

지역리포트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2003년 10월 25일 인쇄

2003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선명종합인쇄사 (02)2277-0056 대표: 김용선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禁함】

ISBN 89-322-6066-4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Thailand's FTA Policy and its Implications

Kyoung Doug Kwo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무역자유화로 특히 양자간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한건의 양자간 FTA 체결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양자간 FTA 대상국은 지역과 경제규모 등에 있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AFTA 출범에 성공한 이후 더욱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는 태국 무역정책의 비전은 EU, NAFTA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며, 태국은 그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 FAX : 3460-1144



정가 5,000원